

정부, 글로벌 ‘탄소국경’ 본격 대응 수출기업 지원 강화·검증기관 확보

산업부 등 범부처 종합대응 회의
EU CBAM 관련 교육·연수 확대
“무역장벽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이른바 ‘수입 탄소관세’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수입 통관 시점이 아니라,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수출기업 입장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는 체감 부담이 크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EU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으로, 해당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식 검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 기업이

CBAM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대응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와 교육·연수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원활히 산정할 수 있도록 기존 관련 지원사업 활용을 독려하고, 향후 검증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내 검증기관 확보 등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체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해당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체가 제도 변화를 저탄소 전환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생산체제 구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후속 준비에 착수하고, EU와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미래직업관 내부 전경.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미래 신직업 체험해보세요”

500평 규모 ‘미래직업관’ 개관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자, 핵융합로 엔지니어 등 미래 신직업 18종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연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경기도 성남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의 ‘미래직업관’을 2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8개 테마, 17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총 18개의 미

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관은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되 체험한다는 컨셉트에 맞춰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 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등으로 구성됐다.

체험은 1회 1시간 기준으로 하루 5회 운영되며, 참가자는 자유롭게 구역을 이동하며 관심 직업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구역은 방탈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직업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촌공간정책 연내 성과 창출”

농촌공간계획 전담지원반 구성
“지방정부 주도 발전전략 뒷받침”

정부가 21일 ‘농촌공간계획’의 전국적 안착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방향 및 올해 중점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융복합산업 집적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정책 성과를 연내에 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마치고, 각각의 농촌특화지구 발굴·육성에 나서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2024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발전의 지도로 삼아 주거, 융복합산업, 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한다. 유형은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e,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지구 등이다. 현재 농촌지역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올해 전국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핵심 과제로 꼽고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이다.

전담지원반은 기관별 담당 권역을 정해 계획 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한다. 농촌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협력 분야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의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앙지원기관과 협업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수부,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

성과사례 발표·사업 시행지침 안내

해양수산부가 ‘2027년도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2일 부산, 30일 대전에서 예정돼 있다.

어촌뉴딜3.0 사업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이다.

어촌·어항재생사업은 2019년 이후 순차적으로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현재의 어촌뉴딜3.0사업은 어촌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재정 투입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어촌경제도약형’,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회복형’의 두 가

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1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유치 규모에 따라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어촌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민간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회복형’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기반을 종합적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다.

공모 설명회에서는 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 성과사례를 발표하고,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아울러 어촌뉴딜3.0 신규사업지 공모와 관련해 사업 유형 개편, 전년도 공모 대비 주요 변경사항,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동부, ‘AI노동법 상담 서비스’ 고도화

이용자 급증… 올해 28억 예산 투입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일상 속 노동법 길잡이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알바’에 탑재된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며, 야간·주말에도 끊임 없는 상담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누적 상담 건수는 11만 7000건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시

간·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노동법 질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이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일평균 이용 건수는 251회에서 466회로 85.7% 늘었다. 올해 1월에는 일평균 1000건을 넘어섰다. 전체 이용자의 37.7%가 야간·주말에 접속해,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노동법 상담’ 수요가 확인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보 탐색 효율도 크게 개선됐다. 노동부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 포털 검색 대비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은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한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권리 침해가 명확한 경우 노동포털과 연계해 사건 접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범위도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 폐광지역 기업 용자지원

태백·삼척·영월·정선·문경 등 대상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폐광지역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산업 용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KOMIR는 21일 ‘2026년 폐광지역 대체산업 용자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 태백·삼척·영월·정선,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7개 시·군의 폐광지역 진흥지구 또는 지정 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다.

대상업종은 제조업(반려동물 연관산업 포함),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연 1.75% 금리(분기별 변동금리)로 용자 지원된다. 상황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거치 후 5년 균등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1일 ~ 2월 19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관할 시·군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